

“녹색성장 핵심은 4대강 살리기”

한승수 총리 광주 방문 ‘공무원과 대화’

한승수 국무총리는 4일 “녹색성장의 단기적 핵심은 4대강 살리기이고 질적 경제성장의 중심에는 기술혁신을 위한 신성장동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광주시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열린 ‘신성장동력 호남권 설명회’에서 “향후 50년 국가발전의 모델이 될 녹색성장에 지자체와 공무원들이 적극 동참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환경을 아우르면서 성장하기 위해 내놓은 질적 성장전략이 녹색 성장이고 그 핵심은 기술혁신과 신성장동력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성장동력 비전과 추진전략,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발전 전략,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LED응용, 신소재·나노융합, 고부가식물산업 등 신성장동력 등에 관한 설명이 이뤄졌다.

이에 앞서 한 총리는 광주시공무원교육원 중강당에서 광주시와 전남도 공무원 2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을 주제로 특강한 뒤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한 총리는 “4년 동안 50조원이 투입될 녹색뉴딜정책의 핵심은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 살리기 전략이다”며 “주위에서 엉뚱한 부분과 연계하고 있지만 강을 재창조하는 사업에 인식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립김치연구소 광주유치와 고흥IC 건설을 지원해 달라는 광주시·전남도 공무원의 요청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광주시 관광구정과 종합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구직자들과 만남을 가진 뒤 장성군을 방문해 군정 현황과 역점시책 등을 보고받았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한승수 국무총리가 4일 광주시 북구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열린 ‘빈자리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참석, 구직에 나선 이주여성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대법 “이용호 게이트 뒷얘기, 명예훼손 아니다”

엄상의 변호사가 ‘이용호 게이트’의 주인공 이씨와 여운환씨의 뒷얘기를 담은 글을 보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용호 씨가 엄상의 변호사와 여운환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천만원을 연대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엄 변호사는 월간조선 2004년 2월호 ‘엄상의 변호사의 사건실록 코너’에 ‘권력, 검사, 주먹, 뻔치사기의 혼란스러운 변주곡’이라는 제목으로 여운환씨와 흥준표 전 검사, 이용호씨의 뒷 얘기를 담은 글을 실었다.

이씨는 “엄 변호사는 여운환의 말만 듣고

그를 미화하고, 나는 뻔치사기를 하면서 권력이나 주먹과 연관된 것처럼 암시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여운환이 이용호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40억원의 약속어음을, 해외 전환사채 발행 앞선 명목으로 10억4천만원의 약속어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검이 로비의혹을 해소시켜 주고 이씨가 거짓말을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씨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15개 문장 중 ‘특검은 결국 여운환이 아무런 로비 역할도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등 3개만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해 1천만원을 엄 변호사와 이씨가 연대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연합뉴스

/ 한국지방신문협회·희망제작소 공동 행정체제 개편 토론회 /



〈박혜자 교수〉 〈정순관 교수〉 〈우윤근 국회의원〉 〈강인호 교수〉 〈김동현 국장〉 〈복문수 교수〉 〈서정훈 처장〉 〈양승주 교수〉 〈조호권 부의장〉

“개편 방식·유형 주민 선택 따라야”

◇사회·박혜자 호남대 인문사회대학장 =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몇차례 시도됐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정답을 낼 수는 없다. 하지만 머리 맞대 입장을 확인하고 이해를 높여나가야 한다.

◇발제1-우윤근 국회의원 = 우리 행정구조는 단계 행정체제의 중층화로 기능이 중복되고, 과다한 인력·예산·시간이 소요돼 고비용·저효율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계층을 단순화하고 행정구역을 광역화해야 한다. 대안으로 ‘도(道) 폐지, 기초자치단체 70여개로 통합 광역화’를 제안한다.

현재 ‘도’는 중앙권력의 견제 의미가 없다. 시장·군수가 ‘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중앙정부를 직접 상대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도의 권한을 ‘통합도시’로 대폭 이양해 경쟁력을 확보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중앙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발제2-정순관 순천대 교수 =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란의 핵심은 효율성과 민주성의 문제다. 우윤근 의원이 제시한 안은 자치입법권·자주재원·자주조직권을 광범위하게 허용한다는 의미에서는 지방분권 취지에 부합한다. 하지만 좀 더 생각하면 오히려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매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다. 결국 중앙 예측화가 심화될 우려가 높다.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들의 합의와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개편 과정이 주민들의 합의 없이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발표하고 실행하는 DAD(Decide-Announce-Defend) 방식이 폐선 안된다. 다양한 통합방식과 유형을 제시하고 주민들이 그 중에서 선택하는 메뉴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박혜자 = 토론 주제 ‘통합도시 체제의 장점과 문제’, ‘광역자치단체(도)의 존재 문제’, ‘초광역행정체제가 필요한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자.

◇강인호 조선대 교수 = 지방행정체제



광주일보와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 주관으로 4일 오후 광주시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체제 개편 광주·전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핵심 의제인 ‘도(道) 폐지’를 둘러싸고 열린 토론을 벌이고 있다.

/최한배기자choi@kwangju.co.kr

“도는 중앙정부-기초단체 완충장치”... 존속해야

광역화로 경쟁력 확보 필요... 광양만권 모델 제시

개편은 결론보다 지역주민의 가치와 선호도를 어떻게 반영하느냐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도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수차례 천명했지만 최근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보면 지방분권의 방향과는 달리 여야 간 정치적 의도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중층제는 수직적 분업체제를 재고시키고 광역적 행정수행이 원활하며 중앙집권화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도’는 폐지해서는 안된다. 또 지역감정 해소 차원에서 ‘도’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는데 행정구역을 60~70개로 나누면 지역감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복문수 전남대 교수 = ‘1계층’ 또는 ‘2계층’이라는 하나를 기준으로 재단하지 말고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선택은 주민들에게 맡겨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결정해서 시행하는 시기는 지났다.

현재 우리 행정은 계층이 광역과 기초로 동일하게 나뉘어져 있다. 공무원 봉급도 모는 자치단체가 같다. 이것이 무슨 지방자

치인가. 지역의 실정에 맞게 광역단체를 없앨 수도 있고 계층을 더 만들 수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결정에 있어서 ‘효율성’만을 추구하기보다는 ‘민주성’을 충분히 반영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접근하면 풀릴 문제다.

◇서정훈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 지방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행정체제 개편’이 아니라 중앙으로부터 실질적인 정치적 분권과 재정적 분권을 이루는 데 있다. 지방자치와 지방민주주의 문제에 대한 고민과 대안이 빠져있는 개편 논의는 의미가 없다.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지방재정 확충 장치를 만들고 중앙-지방간 비현실적 세제개편에 대한 개선방안부터 만들어야 한다.

◇양승주 목포대 교수 = 효율성과 민주성이라는 가치의 틀 속에 가둬놓고 논의해서는 안된다.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순천·여수·광양 등 동부권 도시들은 시·군 통합을 이뤘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효율성·

민주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의 가치는 경쟁력이 우선이다.

또 대부분 2층제를 인정하고 있다. 물론 산업사회는 2층제가 좋다. 하지만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가상공간을 통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조호권 광주시의회 부의장 = 기초단체의 광역화는 많은 갈등을 동반하게 될 것이다.

한 예로 광주 동구와 북구간의 구간 경계문제를 들 수 있다. 동구의 경우 인구 10만명을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친다. 하지만 북구의 입장은 다르다. 이만큼 구역 조정은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50%도 안되는 지방자립도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기능 이양과 자주 재원의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 또 정치권과 정부는 행정체제 개편에 앞서 수도권 규제 해제 정책의 포기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

◇김동현 전남도 행정지원국장 = 규모가 작으면 그만큼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경쟁력 차원에서 ‘도’는 꼭 필요하다. 도를 폐지하기 보다는 연방국가의 주정부와 단일국가의 광역자치단체의 중간 성격의 기능과 권한을 갖는 것이 체제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문, 소명, 사명...
바람직한 세상을 만드는
많은 자선인이 모여서 모입니다!

광신대학교!!!

光神大學校

2009년 3월 5일

사간계 등록생 모집안내

■ 모집대상: ...

■ 모집기간: ...

■ 지원자격: ...

■ 지원방법: ...

■ 지원서류: ...

■ 입학금: ...

■ 등록금: ...